

'맹탕' 정부 관리 속 '안해도 되니까' 방치한 아리셀...이중 삼중 사각지대 속 일터 죽음 커졌다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22 20:11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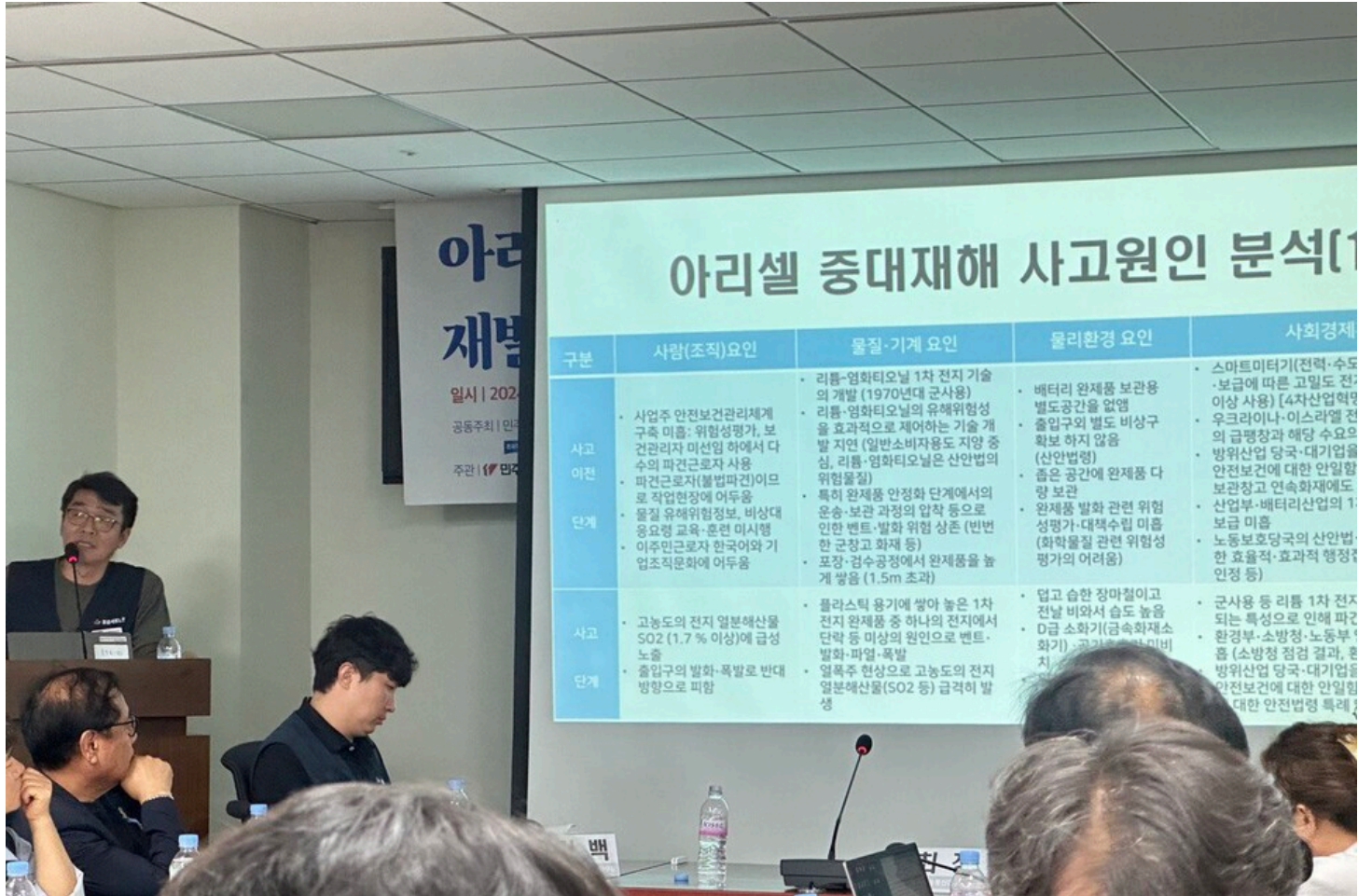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토론회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인삿말과 사진촬영에 30분 걸리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해 놓고 사진 촬영만 끝나면 다 가버립니다. 정부 부처 오라고하면 오지도 않고 와서도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오늘도 정부 관계 부처에서 한 명 왔습니다. 뭐하러 오세요? 그리고 사람 한두 명 죽으면은 그때 돼서 위로를 하니 추도를 하니 대책을 마련하니 그 래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 교수의 분노섞인 발언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국회와 정부의 태도가 토론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한 명 왔다'는 최 교수의 말에 화성시 관계자가 '화성시도 왔다'고 했지만, '그럼 오셨으니까, 토론석 앉으셔서 토론하실거냐'고 최 교수가 되물자 화성시 관계자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수많은 취재진과 대책위로 북적거리던 토론회장에 침묵이 찾아왔다. 엄숙해진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강득구·권향엽·김성희·김태산·박정·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은 토론회에 앞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예견된 참사였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산업단지의 위험은 2015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었다”며 “참사의 근본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이지만, 대책은 없다. 정부 관계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 점검, 안전대책에는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가 개입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한 주체들이 다시 모여 참사가 언론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차별 없는 피해자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민주노총도 피해자 유족,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송성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경시의 부당함이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참사 이후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움직임은 더디고, 성의없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인명경시, 인권 무시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무대책으로 일관해 참사를 야기시킨 노동경시의 이 정부 또한 살인의 공범”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토론회 발표는 현장증언과 5개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증언자로 나선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은 20년간 원형, 각형, 파우치 전지부서의 생산 및 설비 유지보수, 현업부서 안전 담당자다.

정 사무장은 “평소에는 발화와 같은 사고가 발생 되지 않지만 전지는 충방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발화의 위험이 발생된다”며 리튬전지의 위험성과 참사의 원인을 제기했다.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관합동 안전보건활동과 배터리사업 분야의 자격심사 강화,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리튬전지 산업의 종류와 현황,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지산업 종합 안전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감독 강화, PSM 대상사업장 지정 확대,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화학물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리튬 사고대비 물질 지정 관리와 화학사고 정의의 광범위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안법상 배터리 제품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점검, 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2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박종식 한구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재해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이원화로 인한 소통 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체되면서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위험이 하청 또는 파견도급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더해 “법제도의 미비로 재해위험의 전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층적인 하도급 관계 하에서 재해위험의 전가가 복잡

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가 300인이상 사업장에 비해 50인미만 사업장은 1/3수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 근무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발표했다. 대책으로는 ▲도급관계와 고용 특성을 반영해서 원청(대기업)의 지원 ▲지역-업종 수준의 해결방안 모색 ▲중앙정부의 안전보건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자체를 통한 지역단위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 ▲협회/단체/노조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 및 단체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류현철 일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주노동자 재해현황과 소규모 사업장문제와 중첩되는 이주노동자 안전보건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개선방향으로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리셀 대책위 피해자 권리보장팀 정경희 대표는 "피해자의 권리로서 ▲정부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참여할 권리 ▲연대하고 조력 받을 권리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이주민 피해자의 특성과 취약성에 맞는 지원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아리셀 대책위 박세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의 일터에서 이중 삼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더해 대책없는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이 '이주노동자 최대 집단 산재 참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맹탕'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참사를 방치했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차례 경고에도 안전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사측인 에스코넥과 아리셀, 정부당국인 화성시와 경기도, 국가에 각 역할과 요구를 촉구한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끝으로 민관합동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